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방안
2007. 9

목 차

1 지역분류의 필요성

2 지표개발

3 지역분류의 방법

4 지역분류의 결과

5 토론과제

지역분류의 필요성

◆ 지역여건을 감안한 차등지원정책의 토대 필요

- 지역여건을 감안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토대 미약
  - 현재 신활력사업, 개촉지구 등의 사업에서 단편적인 지역분류

- 종전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성장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수준에는 미흡

※ 외국의 경우 지역간 차등지원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도적 바탕 위에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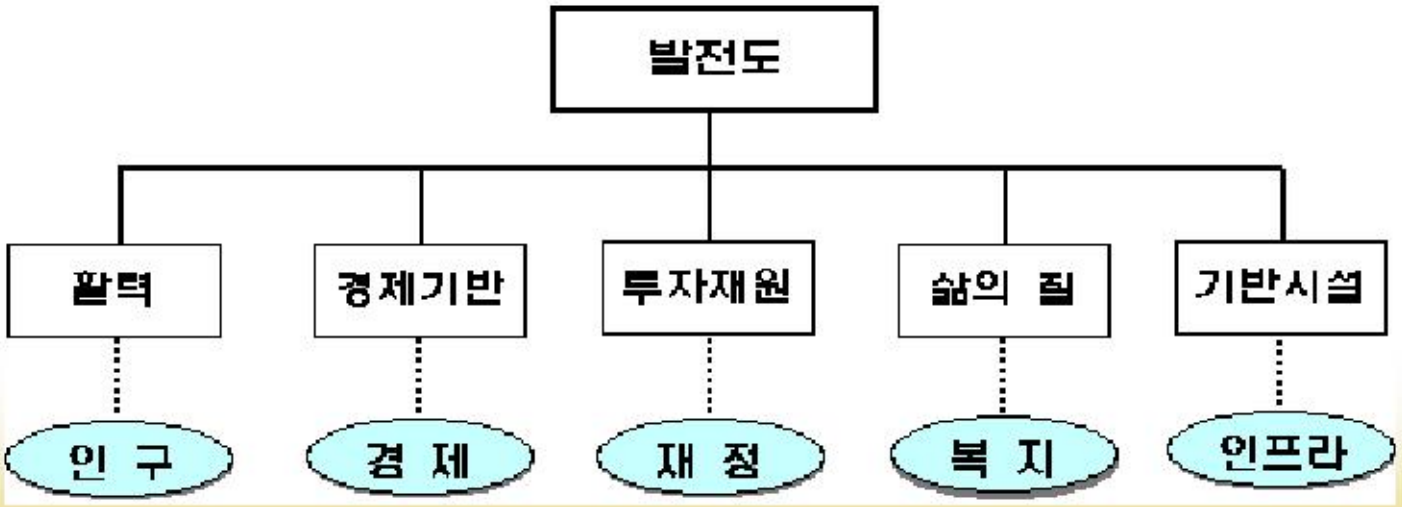
⇨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차원의 지역분류 필요

지표개발

◆지표개발의 준거설정

- 지역분류의 준거 : 지역의 발전정도
- 지역의 발전정도의 정의

"경제기반이 양호하고 재정이 풍부하여, 인구가 성장하고 복지가 양호한 정도"



지표개발

◆ 지표선정 의의

부 문	지 표	선 정 의 의
인구	- 인구변화율	- 경제, 사회, 정치적 기회의 압축
	- 인구밀도	- 인구이동 추세 반영
	- 고령인구비율	- 인구이동의 결과 반영
산업·경제	-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 소득의 대리변수 **(proxy variable)**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내재화 된 산업경제 활성화 정도
	- **1,000**인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 산업활동 활성화 정도 반영
	- 총사업체종사자수 증가율	- 산업활동 활성화 정도의 추세반영
재정	- 재정력지수	- 재정건전도 반영
	- **1**인당 지방세징수액	- 재정부문의 수입, 투자여건 반영
	- 지방세징수액 증가율	- 재정부문의 수입, 투자여건 추세 반영
복지	- **1,000**인당 의료병상수	- 의료부문의 삶의 질적 발전 반영
	- **1,000**인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 교육부문의 삶의 질적 발전 반영
인프라	- 도로율	- 접근성 등 인프라 부문의 발전 반영
	- 상하수도 보급률	- 산업, 생활 등 제반활동 용수 반영

지표개발

◆ 자료의 출처

부 문	지 표	출 처
인구	- 인구변화율	- 통계청(1995~2005)
	- 인구밀도	- 통계청(2005)
	- 고령인구비율	- 통계청(2005)
산업·경제	-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 행자부(2001~2005)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건교부(2005)
	- 1,000인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 총사업체종사자수 증가율	- 통계청(2005) * 통계청(2001~2005)
재정	- 재정력지수	- 행자부(2001~2005)
	- 1인당 지방세징수액 - 지방세징수액 증가율	- 행자부(2005) * 행자부(2002~2005)
복지	- 1,000인당 의료병상수	- 보건복지부(2005)
	- 1,000인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 시군구 통계연보(2005)
인프라	- 도로율	- 시군구 통계연보(2005)
	- 상하수도 보급률	- 환경부(2005)

해외 지역분류

국 가	분류기준	유 형	차등지원
E U	O 지역발전수준 · 1인당 GDP · 실업률 · 지역경쟁력 O 입지특성 · 국경접경지역	3개 대분류 및 7개 세분류 ① 균형촉진지역 · 낙후지역 · 일시적 낙후지역 · 준낙후지역 · 일시적 준낙후지역 ② 경쟁력/고용촉진지역 · 순수 경쟁력/고용 촉진지역 · 일시적 경쟁력/고용촉진 지역 ③ 국경지역간협력지역	· 분류지역별로 우선지원분야 선정하여 지원 · ① 지역에 EU지역개발예산 82%, ② 지역에 15% ② 지역에 3%를 지원
프랑스	<AFR(지역활성화)> · 1인당 소득 · 인구밀도 · 노동력실업률 등	① 낙후지역 ② 준낙후지역 ② 일시적 낙후지역	① 지역 :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보조 ② 지역 :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보조 ② 지역 : 투자금의 최대 15%까지 보조
	<ZRR(농촌재활)> · 인구밀도 · 경제활동참여인구 · 농업종사자인구비율	ZRR(농촌재활지역)에 속하는 코뮌 리스트를 매년 선정하고, 리스트를 1년마다 조정	· 기업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14년간 전체/부분면제 · 노동자는 사회보장부담금 경감
영 국	· 1인당 소득 · 실업률 · 사회보장수혜용 · 제조업 의존도	① Tier 1 : 1인당 소득이 EU평균의 75%이하지역 ② Tier 2 : 경제활동촉진지역 ② Tier 3 : 구조조정지역(과거탄광지역 등)	① 지역 : 투자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보조 (30~50%) ② 지역 : 투자기업규모에 따라 10~45% 보조
독 일	· 평균실업률(50%) · 실업률 전망(5%) · 1인당 소득(40%) · 인프라수준(5%)	· 카테고리 A · 카테고리 B · 카테고리 C · 카테고리 D · 카테고리 E · 지원 불필요지역	· 지역별로 투자비용 보조 차등지원 · 카테고리 A지역(구동독 지역)의 경우 투자기업에 별도 세금감면
태 국	· 1인당 소득 · 인프라 수준 · 투자자 편의 (금융조달, 노동력 등)	· Zone 1 · Zone 2 · Zone 3 ※ Zone 3은 다시 2개 그룹으로 세분, 인센티브 차등화	· 법인세 감면기간 차등 적용(3~8년) · 교통·전기·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차등적용

지역분류의 방법

◆ 종합지수에 의한 지역분류

- 개별 지표값을 Z-Score에 의해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부문별 지표값을 합산하여 종합지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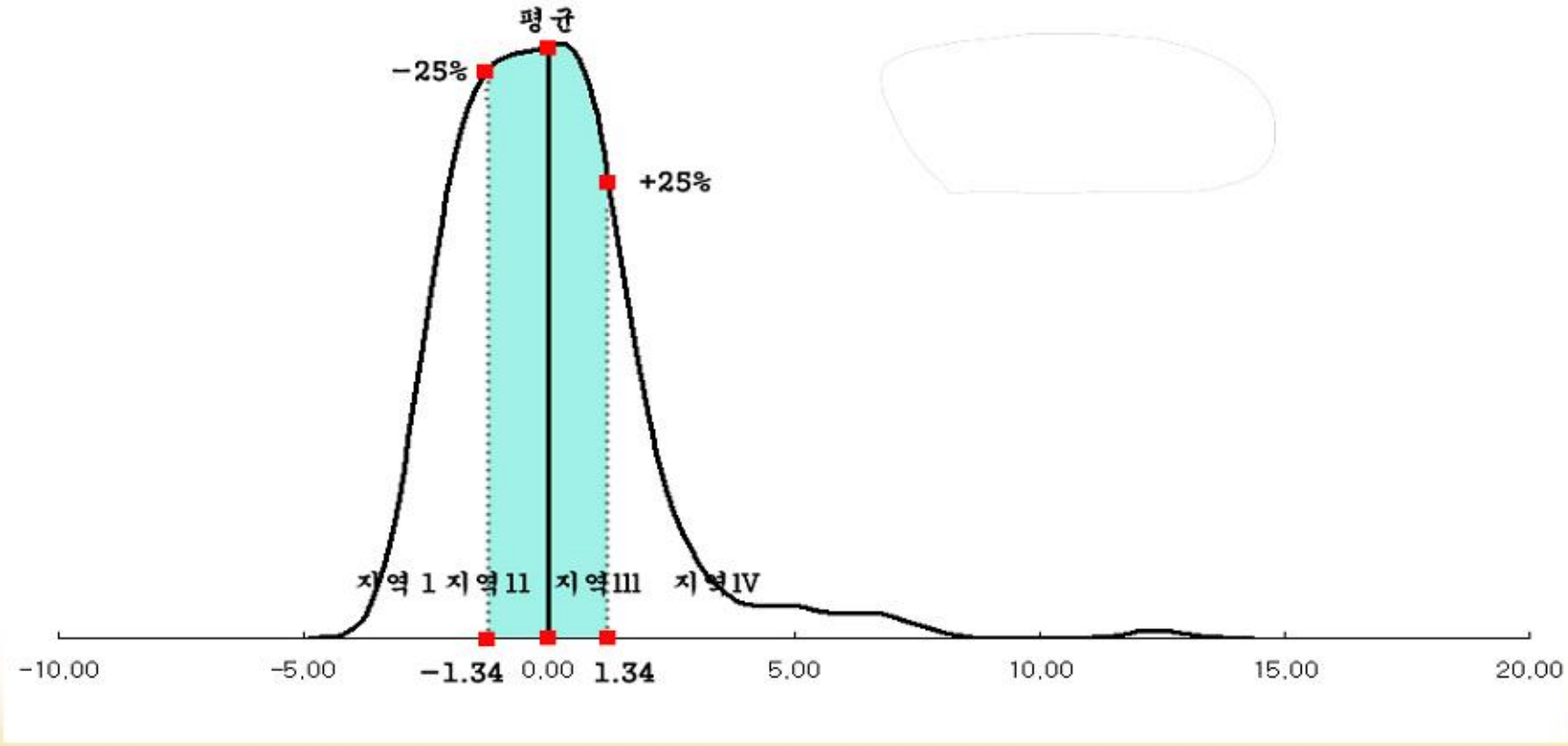
  -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인프라 부문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단순가중치 적용 : Factor analysis의 data-driven method로 타당성 보정

- 산출한 종합지수 평균값 $\pm 0.674\sigma$를 경계로하여 25%씩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

  - 낙후지역은 지역 Ⅰ, 정체지역은 지역 II, 성장지역은 지역 III , 발전지역은 지역 IV로 구분

지역분류의 방법

◆ 지역분류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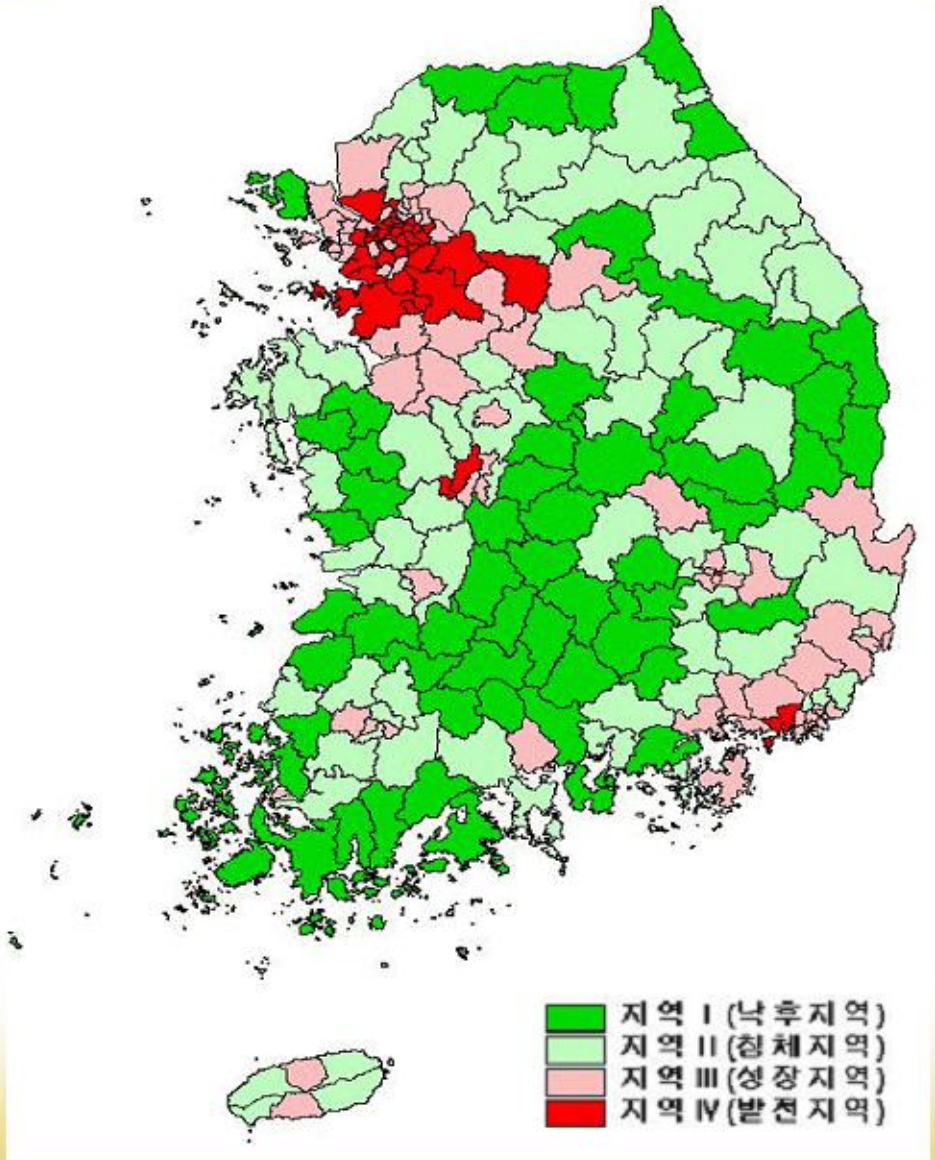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구분	지역 Ⅰ (낙후지역, 60)	지역 Ⅱ (정체지역, 67)	지역 Ⅲ (성장지역, 71)	지역 Ⅳ (발전지역, 36)
수도권 (66)	강화군 (1)	옹진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7)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서울) 관악구 중구(인천) 남구(인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인천)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구리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27)	종로구 중구(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구(인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31)
충청권 (33)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10)	동구(대전)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태안군 당진군 (14)	중구(대전) 서구(대전) 대덕구 청주시 음성군 천안시 아산시 (7)	유성구 계룡시 (2)
강원권 (18)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강원) 양양군 (7)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10)	원주시 (1)	(0)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계속)

구분	지역 Ⅰ (낙후지역, 60)	지역 Ⅱ (정체지역, 67)	지역 Ⅲ (성장지역, 71)	지역 Ⅳ (발전지역, 36)
호남권 (41)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1)	남구(광주), 북구(광주),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14)	동구(광주), 서구(광주), 광산구, 전주시, 목포시, 광양시 (6)	(0)
영남권 (72)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고성군(경남),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1)	영도구, 북구(부산), 금정구, 기장군, 동구(대구), 달성군, 중구(울산),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칠곡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20)	서구(부산), 동구(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부산),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서구(대구), 남구(대구), 북구(대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울산), 동구(울산), 북구(울산), 울주군,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28)	중구(부산), 강서구(부산), 중구(대구) (3)
제주권 (4)	(0)	북제주군, 남제주군 (2)	제주시, 서귀포시 (2)	(0)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Mapping**



◆ 정책적 고려요소

- 정책 활용성 및 광역내 기초자치단체 등급분포 고려

-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일 등급의 지역으로 조정

- 균형발전 감안 수도권과 지방은 1단계 차등

- 높은 발전도, 과밀 등을 고려하고 균형발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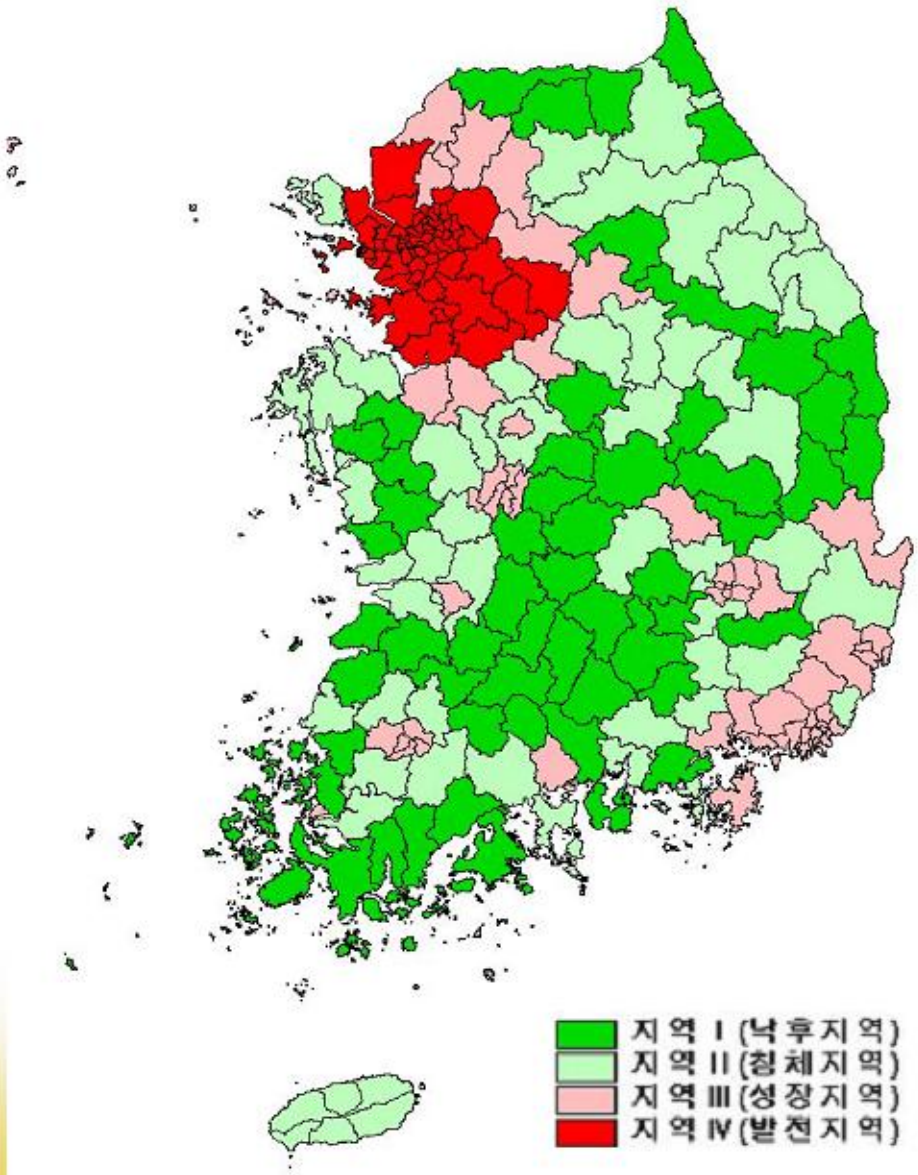
정책요소를 고려한 적용안

구분	지역 Ⅰ (낙후지역, 59)	지역 Ⅱ (정체지역, 55)	지역 Ⅲ (성장지역, 62)	지역 Ⅳ (발전지역, 58)
수도권 (66)	(0)	강화군 (1)	옹진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7)	서울특별시(25) 인천광역시(8)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구리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58)
충청권 (33)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10)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태안군 당진군 (13)	대전광역시(5) 청주시 음성군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10)	(0)
강원권 (18)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강원) 양양군 (7)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10)	원주시 (1)	(0)

정책요소를 고려한 적용안 (계속)

구분	지역 Ⅰ (낙후지역, 59)	지역 Ⅱ (정체지역, 55)	지역 Ⅲ (성장지역, 62)	지역 Ⅳ (발전지역, 58)
호남권 (41)	정읍시 고흥군 남원시 보성군 진안군 장흥군 무주군 강진군 장수군 해남군 임실군 무안군 순창군 함평군 고창군 완도군 부안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21)	군산시 나주시 익산시 담양군 김제시 화순군 완주군 영암군 여수시 영광군 순천시 장성군 (12)	광주광역시(5) 전주시 목포시 광양시 (8)	(0)
영남권 (72)	상주시 울진군 군위군 울릉군 의성군 의령군 청송군 고성군(경남) 영양군 남해군 영덕군 하동군 청도군 산청군 고령군 함양군 성주군 거창군 예천군 합천군 봉화군 (21)	기장군 문경시 달성군 칠곡군 경주시 진주시 김천시 통영시 안동시 사천시 영주시 밀양시 영천시 함안군 창녕군 (15)	부산광역시(15) 대구광역시(7) 울산광역시(4) 마산시 울주군 진해시 포항시 김해시 구미시 거제시 경산시 양산시 창원시 (36)	(0)
제주권 (4)	(0)	제주특별자치도(4)	(0)	(0)

정책요소를 고려한 지역분류 **Mapping**



토론과제

참고 : 지방 순회설명회시 지역의견

- 전주 등 **6**개 권역별 지방설명회 개최 (07.9.4 ~ 9.14)

  - 기업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의 발전된 도시(에 지역 III)라도 낮은 등급으로 분류

  - 234개 지자체 단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권역 단위로 분류

  - 산업.경제에 가중치를 더 부여

  - 복지분야 포함시 지자체가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복지분야에 투자를 줄일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바람직

  -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두 단계 상향 조정 요청

감사합니다.